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처리 요령

2020. 7.



‘일러두기

- ■ 본 업무 처리요령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 급 학교 및 산하 기관에서 급여 또는 각종 대금이 압류되었을 때 업무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지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무교재로 작성되었습니다.
- ■ 따라서, 관련내용 및 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명확한 자문 등을 거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 인용된 법령은 참고하시되, 폐지 또는 정책이 변경이 된 경우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적용시점에서 새로운 관계법령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처리 요령

Contents

I . 채권압류의 이해	
1. 용어정리	1
2. 채권압류의 개요	1
II . 강제집행(압류)의 종류	
1. 가압류명령	3
2. 압류명령	3
III . 압류채권 현금화(지급명령)	
1. 추심명령	5
2. 전부명령	6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7
IV . 제3채무자(경기도교육청)의 채권압류금 관리	
1.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	9
2. 채권압류금 처리절차	10
3. 채권압류 접수 시 확인사항	11
4. 채권압류금 관리 유의사항	11

5. 채권압류금 직접 지급	17
6. 채권압류 해제에 따른 절차	18
V. 채권압류금 공탁처리		
1. 공탁의 개요	20
2. 공탁의 종류	20
3. 공탁서류	21
4. 공탁업무 처리절차	23
5. 공탁 처리 시 유의 사항	24
VI. 주요서식		
1. 서식 리스트	25
VII. 참고자료		
1. 압류금 처리 예시	48
2. 소송 사례	51
3. 관련 법령	53



I 채권압류의 이해



1. 용어정리

가. (채권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지급·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나. (채무자) 채권에 대해 어떤 행위(지급)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다. (제3채무자)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급여 또는 공사 및 물품대금)를 가진 자

※ 제3채무자의 표기

- 공립: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교육감)
- 사립: 학교법인 ○○학원



2. 채권압류의 개요

가. (개념)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공권력으로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

나. (채권의 강제집행)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 국가의 공권력이 동원되는 절차로 제3채무자(경기도 또는 학교법인)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의미함



다. 강제집행의 절차



- 대부분의 경우 채권 가압류먼저 송달되고 이어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해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접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하기도 함

※ 채권압류 예시

A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받은 교직원 B(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A은행(채권자)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속 교직원 B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행위



법원 결정문 예시

- ◆ 사건번호 2000카단1234 채권가압류
- ◆ 채권자
- ◆ 채무자
- ◆ 제3채무자
- ◆ 주문 :
 - 별지 목록 채권압류(가압류)
 - 제3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대한 지급금지
 -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처분과 영수 금함
 - 압류된 채권은 추심할 수 있다(전부한다)
- ◆ 청구금액(청구내용)



Ⅱ 강제집행(압류)의 종류



1. 가압류명령

- 가. (개념) 본 압류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자가 압류하려는 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시키는 명령
- 나. (특성)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 등으로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판결 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가압류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지급이 불가능하고, 종국적으로 판결의 확정되어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있어야 채권압류금을 채권자에 지급할 수 있음

※ (주의) 채권가압류 결정만으로 채권자에게 지급 불가

2. 압류명령

- 가. (개념)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 나. 압류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확정되었으나, 당사자(채무자, 채권자)간에 자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력(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함
- 다. (특성) 일반적으로 압류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명령인 추심 또는 전부 명령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압류 신청하는 경우, 여러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신청 취지 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어야 함

※ (예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사례**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7.06.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배당이의]**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전부금]

-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 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Ⅲ 압류채권의 현금화(지급명령)



1. 추심명령

가. (개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을 때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집행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용어설명) 추심(推尋) :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금전 등을 지급하게 하는 일

나. (특성) 제3채무자에게 도달 즉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권한이 발생됨

- (1) 추심명령 이전 또는 이후에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경합됨
- (2) 다른 압류, 가압류 등 경합상태로 지급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탁함
- (3)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 추심금 지급요청 시 지급 가능
- (4) 채권자에게는 채권에 대해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만 발생
 - 채권에 대한 권리는 이전이 안 되므로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있음
- (5) 피압류채권의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 단, 피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초과할 때에는 다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불가
 - 압류의 효력은 종속된 권리에도 미치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생겨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침



2. 전부명령

가. (개념) 채무자의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명령에 기재된 금액만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移轉)되는 집행법원의 명령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나. (특성)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 의하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

(1) 전부명령은 반드시 먼저 송달된 가압류나 추심명령이 없어야 함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압류부분만은 유효하므로 압류명령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2) 전부명령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로 인해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압류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전부명령으로 압류된 재산)이 소멸되어 다른 채권에 대해 다시 압류 불가함

(3)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음

- 항고제기여부(통상7일)를 파악하여 즉시 항고가 제기된 바 없이 확정된 경우 지급하여야 함
- 지급할 수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으니 유의

※ 전부명령 채권 압류금 지급 시 유의사항

☞ 법원의 전부명령 확정증명원 반드시 구비

(4) 전부명령이 가장 먼저 송달되었다면 이후 송달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음



선순위 채권압류 유무에 따른 전부명령의 효력

▶ 선순위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없는 경우

- 전부명령 결정내역과 채권자의 청구서류 적합여부 검토 후 압류금 지급이 가능하며, 차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접수되었을 경우도 1순위 전부명령의 채권자의 채권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2순위로 다른 채권의 일체 권한행위를 유보해야 함

▶ 선순위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 전부명령은 확정되었으나 선순위 채권 압류가 존재하므로 채권압류의 효력만 발생하며 전부명령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거 채권압류금 전액 공탁처리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가. (개념)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제 압류금에 대해 채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심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여하는 법원의 집행 명령

나. (특성) 가압류 금액이 항상 본압류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 발생

(1) 기존의 채권 가압류 건에 대하여 소송을 거쳐 이자금, 지연금, 소송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가압류 금액에 추가 압류됨

※ 채권 가압류 금액이 10백만원이고 이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은 20백만원 이라면?

⇒ 압류금 10백만원 + 이자금 5백만원 + 지연금 3백만원 + 소송비용 2백만원
= 실제 채권압류 누계금액은 20백만원임



- (2) 가압류 금액 중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 금액만 본압류로 이전하여 단계적으로 채권 가압류 금액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 결정문의‘주문’상 명시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함

※ 가압류 금액 중 일부만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유의할 것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구 분	추 심 명 령	전 부 명 령
효 과	▶추심신고 때까지 제3자의 배당참가가 허용되어 평등적 배분원리에 의해 채권만족	▶제3자의 배당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피전부채권으로 채권의 독점적 만족
집행대상	▶금전채권 뿐만 아니라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도 가능 (민사집행법 제242조)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45조)
효력의 범위	▶압류채권을 집행채권보다 많이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채권 전부에 미침 (민사집행법 제232조)	▶집행채권<집행채권+집행비용> 범위 내에서만 신청과 전부명령의 효과가 나타남
선순위 가압류, 압류 배당 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명령 가능	▶전부명령 불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압류 채권의 이전여부	▶권리이전은 안되고 추심권만 이전함 (민사집행법 제230조)	▶권리 자체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함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효력발생 시기	▶제3채무자에게 도달 즉시 효력 발생	▶반드시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법원신고 의무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였으면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할 필요가 없음



IV 제3채무자의 채권압류금 관리



1. 제3채무자(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압류의 효력

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도달주의)

※ 교육청 산하 학교 및 각 기관에서는 법률상 대표자가 경기도교육감이므로 도교육청에 도달 즉시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나. 도교육청에서 공문 또는 유선으로 압류명령이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각 기관의 회계부서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하여야 함

※ 도교육청에서 공문 또는 유선으로 압류명령이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후 회계업무담당자가 채무자에게 대금(또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무효가 되어 담당자에게 재정 손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관련업무 담당자 등에게 착오 지급에 따른 배상 책임이 따름〉

다. 제3채무자(경기도교육감) 입장에서는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을 하면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음

라.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서면으로 상황을 진술하도록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기에 진술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의무가 있음

※ 「민법사집행법 제237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과 관련된 진술을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제3채무자의 채권압류금 처리절차

[법 원]	▶ 채권압류 결정문 송달
[해당기관]	▶ 통화 및 공문접수 즉시 채권압류대장에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 및 제3채무자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 - 채무자에 채무관계 확인 -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의 경합여부 확인
[해당기관] (급여압류)	▶ 나이스 급여시스템에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뉴 : [국공립급여]-[월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채권압류(탭) - 압류일자, 압류기관(채권자), 압류금액, 압류세부내용 등을 입력하고 사용여부를 “예”로 선택 후 저장 - 급여대장 조회시 채권압류금 공제 처리 되었는지 확인
[관할지역청] (급여압류)	▶ 매월 급여일 해당 기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채권 압류금 입금
[해당기관]	▶ 채무자별 별단예금*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외현금 중 “채권압류금”으로 관리 ▶ 일정기간 보관 후 경합이 있거나 압류 해제통지가 없을 경우 ⇒ 공탁 처리 ▶ 전부명령권자나 경합이 없는 추심명령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관련 서류 확인 후 지급 ▶ 법원으로부터 모든 압류에 대한 해제통지서 또는 취소 결정문 송달된 경우 ⇒ 해당 채무자에게 지급

※ **별단예금**은 정부보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학교가 거래하는 은행이 제1금융권(농협중앙회)인 경우 해당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채권압류금에 대한 정부보관금으로 관리가 가능하나 단위 농협 등인 경우 별도통장을 만들어서 보관



3. 채권압류 결정문 접수 시 확인사항

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

- 제3채무자의 정확한 표시 여부
- 표시된 채권의 소관기관 확인

※ 소관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압류명령의 경우 우선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전 기관에 통지 후 관할 법원을 통해 소관기관 확인 필요

나. 결정문 상 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공사·용역·물품 대금과 급여 등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각종 대금을 제3채무자(경기도교육청)가 가지고 있는지 압류채권 유무 파악

다. 압류의 효력발생은 제3채무자 접수, 송달일(접수일) 기준임

- 사업부서로 착오 배부되어 장시간 방치될 경우 채무자 수령 등 지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채권 취급부서로 전달 조치

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의 주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

마.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는지 주의

바. 채권압류(가압류 포함) 결정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주소, 상호명칭과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 법원의 변경결정 없이 임의로 해석 할 수 없음 (법률대리인과 유선통화 등)

4. 채권압류금 관리 유의사항

가. 급여압류

- (1)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기여금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을 아래의 압류방법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따라 급여 압류 가능



- ※ 단, 급여 공제액 중 교직원공제회비 및 공제회 대출금은 원천징수액에 미 포함
- ※ 급여 총액에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만 해당이 되므로, 그 이외의 수당은 결정문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 불가



급여지급시 압류 가능액

- 185만원 이하 → 압류가능금액 0원
-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 압류가능 급여액 -185만원
-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압류가능 급여액/2
- 600만원 초과 → 급여액 - (300만원+[(급여액/2)-300만원]/2))
- ※ 위 금액은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급여 총액으로 계산함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에 따라 계산한 사항이므로 법령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압류불가「공무원 연금법 제32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 ※ 단, 명예퇴직수당은 결정문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압류의 대상임
「민사집행법 제246조」

- (3) 채권자가 경기도내에서 타학교로 전출시 전출학교에서는 반드시 전 입학교로 급여압류관련 서류일체(결정문 및 채권압류내역등) 및 압류 보관금을 인수인계하여 채무변제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함

- ※ 공·사립간 전출 또는 타시도로 전출의 경우 제3채무자를 달리하므로 채무변제의 의무가 승계되지는 않음

- (4) 송달된 모든 채권압류 결정문에 명시된 압류금 합계액에 압류 공제금이 도달하게 된 경우 별도의 채권압류에 대한 해제 통지가 없더라도 급여의 압류금 공제를 중지함



나. 공사대금 압류

(1) 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

-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음
-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 산정

※ 단,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노무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액 압류 가능



노무비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 ①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1999.8.6〉
-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과 압류 등의 우선순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자가 발주청에 직접지급 요구서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압류 또는 전부명령 등이 직접지급 요구서보다 먼저 도달했을 경우 압류 등이 우선
- 직접지급 요구서가 먼저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직접지급이 우선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다 하여 항상 직접지급이 우선하는 것이 아님



관련 법령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사례 하도급대금 직접사유 발생 전 집행보전 된 채권압류 소멸여부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음

(3)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일반 법원결정문이 경합하는 경우 지급 순위

- 1순위: 국세(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71조) ⇒ 2순위: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8조) ⇒ 3순위: 일반채권
-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료 관련 채권자는 공공기관이므로 별도 법원의 압류 결정문 없이 국세청 및 지자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압류통지서를 발송
- 우선 징수 규정이 있더라도 징수급 체납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일반채권 압류 등이 복잡하게 경합되어 있을 경우 집행법원의 반려 사유가 없다면 가급적 공탁 의뢰하여 업무 부담감 최소화(압류경합 채권들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
- 단, 징수금 등 체납압류만으로는 공탁 불가하며 민사집행법에 의한 일반채권 압류 등과 함께 경합되어 있어야 함



**압류금지 채권**

※ 관련법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

-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등)
-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 병사(兵士)의 급료
-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급여채권의 2분의1 상당액이란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1을 말함)
- ▶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 및 선원의 퇴직수당은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 연금법」 제3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선원법」 제124조)
-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 ▶ **명예퇴직수당** : 2분의 1에 한하여 채권압류의 대상임
- ▶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상당히 예상되는 때부터 압류할 수 있음
- ▶ 명예퇴직수당 압류조건 : 압류대상채권이 명예퇴직수당임을 명시해야함
(급료, 상여금, 수당 등 만을 압류대상채권으로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
- ▶ 공사대금 중(하도급포함)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직·간접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음(「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 부가세는 압류대상임



5. 채권압류금 직접 지급

가. (지급조건) 경합이 없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경우에만 지급

※ 가압류만 있는 경우 지급이 불가

나. (지급시기) 공사준공 및 납품완료 등에 따른 검사(수)가 끝나고 사업 완료 후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 채권자의 채권압류금 청구시 구비서류

- (1) 청구서(또는 청구공문) 1부.
- (2)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사본 1부.
- (3) 인감증명서(채권압류금 청구용) 1부.
- (4) 계좌입금의뢰서 또는 통장사본 1부.
- (5) 확정증명원 (전부명령인 경우) 1부.

※ 전부명령에 의한 청구시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추심명령에 의한 청구시도 업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 송달증명원 발급가능

- (6) 납세 및 납부증명서 (전부명령인 경우) 1부.
 -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3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 4항
- (7) 위임장 및 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대리인 청구만 해당)



라. 지급 시 유의사항

- (1) **(압류금의 지급)** 결정문상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 한하며, 예금이자등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지급
- (2) **(채권자 신분확인)** 채권자에게 압류금 지급시 신분증 확인하여 본인 여부 확인(본인이 아닐 경우 : 위임장 확인)
- (3) **(인감 확인)** 채권 관계의 모든 서류에 날인되는 채권자 인감

6. 채권압류 해제에 따른 절차

- 가. 채권압류는 반드시 법원의 해제통지서 또는 취소결정문이 경기도교육청에 송달되어야만 압류명령이 해제됨
- 나. 해당 채무자의 모든 채권압류 결정문에 대해 압류해제 통지서가 송달 되면 압류금을 즉시 채무자에게 반환
- 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해제 또는 취소 통지서 발급 불가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서 또는 전부명령 포기서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해 전부명령 해제됨

※ (예시) 전부명령의 해제(포기)

- 전부명령 확정 후 채무자가 전부 채권자에게 임의 변제하고 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 후 공증을 받아 전부금에 대한 수령포기(해제통보 또는 포기각서 등으로도 표현)를 하여 오거나,
- 채무자에게 전부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서를 제출(채권자의 채권 양도용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해제하기도 함(이 경우 확인차원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의견을 확인하고 압류 해제)

- (3) 법원의 해제통지서 및 확정된 전부명령에 대한 포기각서 접수 시 해당 건에 대한 채권압류는 효력 상실함



개인회생제도

- ▶ (개요)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면제하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
- ▶ (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개인회생절차) (채무자) 신청 → (법원) 개인회생개시결정 → (법원) 변제계획 인가 결정 (또는 개인회생인가결정)
-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이미 접수된 채권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되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을 제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함
 - 채무자는 해당 집행법원에 인가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은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이 당해 강제집행에 대해 다르게 정하지 않은 한 제3채무자에게 집행해제 통지하여야 함
 - 즉, 법원에서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어야만 채권압류가 해제되는 것임
- ▶ 처리 시 유의사항
 - 인가 결정 후 각 기관에서 보관 중인 채권압류금은 일반적으로 인가결정문 및 개인회생위원회의 별도 통지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법원 개인회생위원회로 처리방법 확인 후 처리할 것



V 채권압류금 공탁처리



1. 공탁의 개요

가. (개념) 변제자(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채권압류금)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

※ 용어설명

◆ 공탁(供託) :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함

※ 임치 : 돈이나 물건을 남에게 맡겨 둠

나. 공탁원인

- (1) 채권자가 다수여서 경합이 있는 경우
- (2)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 (3)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다. 관할공탁소

- (1)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최초 압류명령이 들어온 법원
- (2) (가압류만 있는 경우) 결정문이 송달된 법원 중 선택
- (3)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2. 공탁의 종류

가. 집행공탁 <채권자들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

- (1) (근거) (가압류만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제248조 및 제291조
(본압류가 포함된 경우)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
- (2) (개념) 변제자(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변



제의 목적물(채권압류금)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배당을 공탁소의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

(3) (원인) 채권자가 다수여서 경합이 있는 경우

※ (예시) 공사 및 물품구매의 대금이나 교직원의 급여 지급 시 2건 이상의 채권 압류로 인해 경합되어 채권압류금을 나눠 줄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그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공탁소에 신청하는 공탁

나.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지급이 불가능 할때>

(1) (근거) 「민법」제487조

(2) (개념) 채권자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3) (원인) ①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 ③채무자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예시) 하자보수보증금 현금보관 후 만료일이 되었으나, 업체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되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 그 외 보관공탁, 해방공탁, 혼합공탁 등 여러 공탁방법이 있음

3. 공탁서류([붙임3] 자료 참고)

가. 본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가 있는 경우 (p.29~32 참고)

- 공탁서(금전)
- 공탁원인 사실(가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내용)
- 사유신고서 및 사유신고 사실(공탁신고사유-경합 등)



- 사건개요(사건번호 및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 청구액, 접수일)
- 위임장(공탁공무원 대리인 위임)
- 법원결정문 사본 및 압류 보관금

나. 가압류만 있는 경우 (p.33~38 참고)

- 공탁서(금전-양식)
- 공탁원인 사실(가압류 내용)
- 공탁통지서
- 공탁 사실통지서(채권자별로 작성)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공탁공무원 대리인 위임)
- 법원결정문 사본
- 송달수수료 (3,020원 × 압류권자수)
- 압류보관금

다. 변제공탁의 경우 (p.39~47 참고)

- 공탁서(금전-양식)
- 금전 공탁통지서
- 채권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공탁공무원 대리인 위임)
- 송달수수료(3,020원 × 2회)
- 압류 보관금



4. 공탁업무 처리절차

▶ 공탁서류 작성

- 공탁할 금액 확인: 별단예금으로 관리 중인 예금 해지 및 이자 산출 등



▶ 공탁업무 위임 요청

- 소관기관 담당자가 경기도교육청 채권압류 담당자에게 공탁서 검토 받은 후 공탁사무 대리인 지정 요청 공문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실로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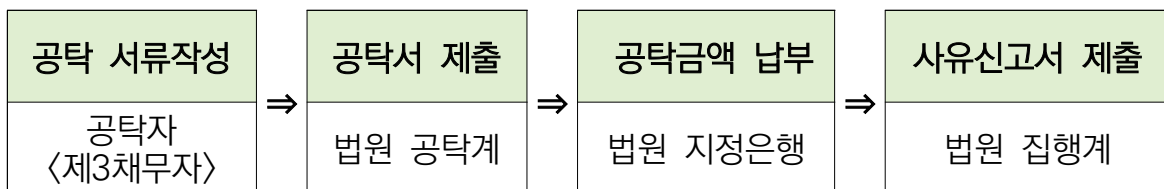


▶ 공탁서 직인 날인 및 위임장 수령

-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송한 공탁사무위임 공문접수 후 공탁예정일에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실 방문 (공탁서류 일체+법원 결정문 사본 3부 지참)



▶ 법원의 공탁계 및 기타집행계에 제출



※ 공탁완료 후 수리된 금전공탁서 사본 경기도교육청 담당자 내부메일로 전송



5. 공탁 시 유의사항

- 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압류금 공제가 완료되어 마지막 공탁 수행 시 반드시 해당 통장을 해지하여 이자까지 공탁할 것
- 나. 공탁소에 공탁서류 제출일까지 접수된 모든 법원 결정문은 모두 공탁서에 기입할 것
 - 경기도교육청으로 공탁요청 공문 발송 후 공탁소에 공탁소 제출일 사이에 접수된 결정문도 포함
- 다. 공탁의 시기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장기간 미공탁 시 채권자들의 채무금에 대한 지급이 늦어지므로 채권자들의 요구가 있거나, 없더라도 압류금에 대한 보관기관이 길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공탁처리할 것



VI

주요 서식



「서식 리스트」

가. 채무자별 채권압류 관리 대장

나. 채권압류 및 지급내역(총괄)

다. 공탁 처리 요청 공문(예시)

라. 추심 또는 전부명령 있는 경우 공탁 양식

마. 가압류만 있는 경우 공탁 양식

바. 변제공탁 양식



가. 채무자별 채권압류 관리 대장

채권압류자 관리대장

● 채무자 성명 :

연 번	채권자	사건 번호	일 자		결정 기관	압류명령내역				압류 청구 금액	청구 금액 누계	결 재		
			결정	접수		당초	변 경					계	행정 실장	교장
							종류	일자	접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채무자 개개인에 대한 채권자 현황 총괄표

채권압류 및 지급내역(총괄)

[illegible]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 27



다. 공탁사무 대리인 지정 요청 공문(예시)

함께해요 청탁금지법! 만들어가요 청렴대한민국!

○○초등학교

수신 경기도교육감(재무담당관)

(경유)

제목 『○○초등학교 급식물품 구매대금 지급』 건 관련 공탁처리를 위한
공탁사무 대리인 지정요청

1. 관련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 『○○초등학교 급식물품 구매대금 지급』건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에서는 채무자에게 급식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공탁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사, 용역대금 등)
2. 우리학교에 재직 중인 (직)ex.교사, 지방공무원 김○○의 급여 압류가 있어 그동안 압류금을 관리하고 있는 바, 채권자들의 경합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탁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급여)

□ 공탁사무 대리인 지정요청 현황

순번	소속	직급	성명	비고
1	○○초등학교	지방교육행정주사보	김주무	

붙임 ○○초등학교 급식물품 구매대금 지급 관련 공탁서류 각1부. 끝.

○○초등학교장

주무관 김주무 교육행정실장 박실장 교장(초등) 00/00 나교장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0000 (2020. 00. 00.) 접수 ()
우 00000 경기도 ○○시 ○○구 ○○대로 123번길 12 (○○동,○○초등학교) /http://www.○○.es.kr
전화번호 031-000-0000/팩스번호 031-000-0000 / 00000@korea.kr /비공개(5)

청탁금지법을 실천하는 당신! 우리가 모두 응원합니다.



라. 추심 또는 전부명령 있는 경우 공탁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탁번호		2020년 금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자	성명 (상호, 명칭)	경기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소관 : (소관기관명))		피공탁자	성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35-83-00968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주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031-249-0385			전화번호				
공탁금액		일금(한글)정 (숫자) 원		보관은행		은행 지점			
공탁원인사실		별지와 같음							
비고(첨부서류 등)		1. 공탁관련 증빙서류 각1부 2. 위임장 1부						<input type="checkbox"/> 계좌납입신청 <input type="checkbox"/> 공탁통지 우편료 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없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공탁자 성명 경기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인(서명)				대리인 주소 (소관기관 주소) 전화번호 (소관기관 전화번호) 성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div>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div>									

-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4.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6.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7.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공탁원인사실

〈급여〉

제3채무자인 신고인은 채무자인 ○○○에게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분까지 금 8,229,070원을 지급하여야 할 지급 채무금이 있으나, 동 지급 채무금(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어 제3채무자로서는 지급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제외한 급여 금 8,229,07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에 의하여 공탁함.

〈공사대금 등〉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무자인 (주)○○○○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의 경합이 있어 제3채무자로서는 지급할 수 없으니,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금(숫자)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채123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송달주소 : 충청남도 순천시 ♡♡로 38

채무자 : (주)○○○○

채무자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로 26

제3채무자 : 공탁자(경기도교육감)

청구금액 : 100,000,000원

위 결정정보는 서기 2020년 00월 00일 송달

2.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채183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주)

채권자 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구 ◇◇로 37

채무자 : (주)○○○○

채무자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로 26

제3채무자 : 공탁자(경기도교육감)

청구금액 : 20,000,000원

위 결정정보는 서기 2020년 00월 00일 송달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단1114 채권가압류

채권자 : (주)△△△△

채권자 송달주소 : 경기도 ○○시 ☆☆로 45

채무자 : (주)○○○○

채무자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로 26

제3채무자 : 공탁자(경기도교육감)

청구금액 : 80,000,000원

위 결정정보는 서기 2020년 00월 00일 송달



사 유 신 고 서

신 고 인 : 경기도교육감

사업자번호 : 135-83-00968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위 신고인은 채무자인 (주)○○○○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일금(숫자)원정)에 대하여 금전공
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사유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
법원 ☆☆지원 2020년 금 제 호로 공탁하였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그 사
유를 신고합니다.

붙 임 : 금전공탁서(변제등) 1부

2020 년 월 일

위 신고인 경기도교육감

○○지방법원 ☆☆지원 귀하





위임장

주 소 : (소관기관 주소 입력)

소 속 : (소관기관명 입력)

직 급 : (대리인 직급 입력)

성 명 : (대리인 성명 입력)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금전을 공탁하는 업무행위 일체를 위임함.

2020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지방법원 ☆☆지원 귀하





마. 가압류만 있는 경우 공탁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2020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경기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소관 : (소관기관명))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채무자 성명 기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35-83-00968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채무자 개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기재)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채무자 주소기재)	
	전화번호	031-249-0385			전화번호	(채무자 전화번호 기재)	
공 탁 금 액		일금(한글)정 (숫자) 원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공탁원인사실		별지와 같음					
비고(첨부서류 등)		1. 공탁관련 증빙서류 각1부 2. 위임장 1부 <input type="checkbox"/> 계좌납입신청 <input type="checkbox"/> 공탁통지 우편료 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없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공탁자 성명 경기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경기도 교육감 이 재 정 인(서명)				대리인 주소 (소관기관 주소) 전화번호 (소관기관 전화번호) 성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법원 지원 공탁관 (인)</div>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div>							

-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4.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6.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7.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공탁원인사실

〈급여〉

제3채무자인 신고인은 채무자인 ○○○에게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분까지 금 8,229,070원을 지급하여야 할 지급 채무금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채권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로서는 지급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금(숫자)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동법 제291조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공사대금 등〉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무자인 (주)○○○○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로서는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금(숫자)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동법 제291조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단1237 채권가압류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송달주소 : 충청남도 순천시 ♥♥로 38

채무자 : (주)○○○○

채무자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로 26

제3채무자 : 공탁자(경기도교육감)

청구금액 : 100,000,000원

위 결정정보는 서기 2020년 00월 00일 송달

2. 의정부지방법원 2020카단1835 채권가압류

채권자 : ◇◇◇◇◇(주)

채권자 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구 ◇◇로 37

채무자 : (주)○○○○

채무자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로 26

제3채무자 : 공탁자(경기도교육감)

청구금액 : 20,000,000원

위 결정정보는 서기 2020년 00월 00일 송달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단5943 채권가압류

채권자 : (주)△△△△

채권자 송달주소 : 경기도 ○○시 ☆☆로 45

채무자 : (주)○○○○

채무자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로 26

제3채무자 : 공탁자(경기도교육감)

청구금액 : 80,000,000원

위 결정정보는 서기 2020년 00월 00일 송달

금전 공탁통지서

공 탁 번 호		2020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경기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소관 : (소관기관명))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채무자 성명 기재)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채무자 주소 기재)			
공 탁 금 액		일금(한글)정 (숫자)원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공탁원인사실		별지와 같음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없음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공탁자 성명 경기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경기도 교육감 이 재 정 인(서명) 대리인 주소 (소관기관 주소) 성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자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 출급청구시 구비서류 등 ※ [별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court.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7. 사건 내용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지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사건이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발송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법원 지원 공탁관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문의전화 :) </div>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 35



(별지)

공탁원인사실

〈급여〉

제3채무자인 신고인은 채무자인 ○○○에게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분까지 금 8,229,070원을 지급하여야 할 지급 채무금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채권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로서는 지급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금(숫자)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동법 제291조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공사대금 등〉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무자인 (주)○○○○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로서는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금(숫자)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동법 제291조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단1237 채권가압류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송달주소 : 충청남도 순천시 ♥♥로 38

채무자 : (주)○○○○

채무자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로 26

제3채무자 : 공탁자(경기도교육감)

청구금액 : 100,000,000원

위 결정정보는 서기 2020년 00월 00일 송달

2. 의정부지방법원 2020카단1835 채권가압류

채권자 : ◇◇◇◇◇(주)

채권자 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구 ◇◇로 37

채무자 : (주)○○○○

채무자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로 26

제3채무자 : 공탁자(경기도교육감)

청구금액 : 20,000,000원

위 결정정보는 서기 2020년 00월 00일 송달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단5943 채권가압류

채권자 : (주)△△△△

채권자 송달주소 : 경기도 ○○시 ☆☆로 45

채무자 : (주)○○○○

채무자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로 26

제3채무자 : 공탁자(경기도교육감)

청구금액 : 80,000,000원

위 결정정보는 서기 2020년 00월 00일 송달



위 입 장

주 소 : (소관기관 주소 입력)

소 속 : (소관기관명 입력)

직 급 : (대리인 직급 입력)

성 명 : (대리인 성명 입력)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금전을 공탁하는 업무행위 일체를 위임함.

2020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지방법원 ☆☆지원 귀하





(채권자 수 대로 작성)

○○지방법원 ☆☆지원

공탁사실 통지서

가압류채권자 ○ ○ ○ 귀하

사 건 (채권압류 사건번호 기재 ex) ○○지방법원☆☆지원 2020카단237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채권자 기재 ex)○○○○(주) 대표 ☆☆☆

채 무 자 (채무자 기재 ex)○○○○(주) 대표 ☆☆☆

제 3 채무자 경기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경기도교육감 ○○○

(소관기관 : (소관기관명 기재))

위 가압류사건의 피가압류채권이 아래와 같이 공탁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공탁사건번호 2020년 금 호

금 액 (공탁금액 기재 ex)금30,000,000원)

공 탁 자 경기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경기도교육감 ○○○

(소관기관 : (소관기관명))

피 공 탁 자 (채무자 기재 ex)○○○○(주) 대표 ☆☆☆

공 탁 일 자 (공탁일자 기재 ex)2020년 8월 31일)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

공 탁 관 ㉠



바. 변제공탁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2020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경기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소관 : (소관기관명))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채권자 성명 기재하며,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상대적불확지 : A 또는 B로 기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35-83-00968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채권자 개인(법인)번호 기재) ※상대적불확지 : A 또는 B로 기재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채권자 주소기재) ※상대적불확지 : A 또는 B로 기재	
	전화번호	031-249-0385			전화번호	(채권자 전화번호 기재) ※상대적불확지 : A 또는 B로 기재	
공 탁 금 액		일금(한글)정 (숫자) 원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공탁원인사실		별지와 같음					
비고(첨부서류 등)		1. 공탁관련 증빙서류 각1부 2. 위임장 1부 <input type="checkbox"/> 계좌납입신청 <input type="checkbox"/> 공탁통지 우편료 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없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공탁자 성명 경기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경기도 교육감 이 재 정 인(서명)				대리인 주소 (소관기관 주소) 전화번호 (소관기관 전화번호) 성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div>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div>							

-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4.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6.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7.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공 탁 원 인 사 실(채권자 확지공탁)

공탁자인 경기도교육감(소관 : ○○초등학교)은 피공탁자인 ○○○○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에 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대금수령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는 등 피공탁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또는 피공탁자의 대금 수령거절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공탁자로서는 피공탁자에게 채무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금(숫자)원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 채무금 공탁관련 계약 등 개요사항 -

1. 계약건명 : ○○초등학교 급식물품(공산품) 구매계약
2. 계약상대자 : ○○○○ 주식회사
3. 계약금액 : 10,000,000원
4. 납품(기성, 준공, 완수)금액 : 9,000,000원
5. 기지급액 : 0원
6. 금회 대금지급 예정액 : 9,000,000원



(별지)

공 탁 원 인 사 실(채권자 불확지공탁1)

공탁자인 경기도교육감(소관 : ○○초등학교)은 피공탁자인 (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에 대하여 피공탁자인 (주)○○○○은 다른 피공탁자 (주)☆☆☆☆에게 금9,000,000원을 채권양도를 하여 공탁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향후에 (주)○○○○가 채권양도를 철회하여(또는 채권양도에 대한 법적분쟁이 있어 채권양도통지의 법적효력을 판단할 수 없는 등) 피공탁자에게 공탁자로서는 피공탁자에게 채무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금(숫자)원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 채무금 공탁관련 계약 등 개요사항 -

1. 계약건명 : ○○초등학교 급식물품(공산품) 구매계약
2. 계약상대자 : (주)○○○○
3. 계약금액 : 10,000,000원
4. 납품(기성, 준공, 완수)금액 : 9,000,000원
5. 기지금액 : 0원
6. 금회 대금지급 예정액 : 9,000,000원

- 채권양도 통지사항 -

1. 채권양도양수건명 : ○○초등학교 급식물품(공산품) 구매계약 건 채권양도통지
2. 채권양도인 : (주)○○○○
3. 채권양수인 : (주)☆☆☆☆
4. 양도양수금액 : 9,000,000원
5. 채무자 채권양도통지서 접수일 : 2020.00.00





(별지)

공 탁 원 인 사 실(채권자 불확지공탁2)

공탁자인 경기도교육감(소관 : 경기도○○교육지원청)은 (가칭)○○초등학교 신축공사 계약상대자인 (주)○○○○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에 대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주)○○○○의 하도급사인 피공탁자 (주)☆☆☆☆ 기성 또는 준공 타설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공탁자로서는 피공탁자에게 채무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금(숫자)원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 (가칭)○○초등학교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 사항 -

1. 계약건명 : (가칭)○○초등학교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철근콘크리트)
2. 원도급사 : (주)○○○○
3. 하도급사 : (주)☆☆☆☆
4. 하도급 계약금액 : 200,000,000원
5. 원도급사 주장 타설금액 : 180,000,000원
6. 하도급사 주장 타설금액 : 200,000,000원
7. 기지금액 : 100,000,000원
8. 공탁금액 : 100,000,000원

금전 공탁통지서

공 탁 번 호		2020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경기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소관 : (소관기관명))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채권자 성명 기재) ※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별로 각1부씩 작성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채권자 주소 기재) ※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별로 각1부씩 작성			
공 탁 금 액		일금(한글)정 (숫자)원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공탁원인사실		별지와 같음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없음					
<p>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공탁자 성명 경기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대리인 주소 (소관기관 주소) 경기도 교육감 이 재 정 인(서명) 성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p>									
<p>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p> <p>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p> <p>2. 공탁금 출급청구시 구비서류 등</p> <p>※ [별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3.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p> <p>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p> <p>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p> <p>6.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p> <p>7. 사건 내용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지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로 신청된 사건이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발송</p>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 지원 공탁관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문의전화 :)</p>									

※ 피공탁자가 국가인 경우 공탁통지서는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함.





(별지)

공 탁 원 인 사 실(채권자 확지공탁)

공탁자인 경기도교육감(소관 : ○○초등학교)은 피공탁자인 ○○○○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에 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대금수령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는 등 피공탁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또는 피공탁자의 대금 수령거절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공탁자로서는 피공탁자에게 채무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금(숫자)원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 채무금 공탁관련 계약 등 개요사항 -

1. 계약건명 : ○○초등학교 급식물품(공산품) 구매계약
2. 계약상대자 : ○○○○ 주식회사
3. 계약금액 : 10,000,000원
4. 납품(기성, 준공, 완수)금액 : 9,000,000원
5. 기지금액 : 0원
6. 금회 대금지급 예정액 : 9,000,000원



(별지)

공 탁 원 인 사 실(채권자 불확지공탁1)

공탁자인 경기도교육감(소관 : ○○초등학교)은 피공탁자인 (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에 대하여 피공탁자인 (주)○○○○은 다른 피공탁자 (주)☆☆☆☆에게 금9,000,000원을 채권양도를 하여 공탁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향후에 (주)○○○○가 채권양도를 철회하여(또는 채권양도에 대한 법적분쟁이 있어 채권양도통지의 법적효력을 판단할 수 없는 등) 피공탁자에게 공탁자로서는 피공탁자에게 채무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금(숫자)원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 채무금 공탁관련 계약 등 개요사항 -

1. 계약건명 : ○○초등학교 급식물품(공산품) 구매계약
2. 계약상대자 : (주)○○○○
3. 계약금액 : 10,000,000원
4. 납품(기성, 준공, 완수)금액 : 9,000,000원
5. 기지금액 : 0원
6. 금회 대금지급 예정액 : 9,000,000원

- 채권양도 통지사항 -

1. 채권양도양수건명 : ○○초등학교 급식물품(공산품) 구매계약 건 채권양도통지
2. 채권양도인 : (주)○○○○
3. 채권양수인 : (주)☆☆☆☆
4. 양도양수금액 : 9,000,000원
5. 채무자 채권양도통지서 접수일 : 2020.00.00





(별지)

공 탁 원 인 사 실(채권자 불확지공탁2)

공탁자인 경기도교육감(소관 : 경기도○○교육지원청)은 (가칭)○○초등학교 신축공사 계약상대자인 (주)○○○○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에 대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주)○○○○의 하도급사인 피공탁자 (주)☆☆☆☆ 기성 또는 준공 타설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공탁자로서는 피공탁자에게 채무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금(숫자)원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 (가칭)○○초등학교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 사항 -

1. 계약건명 : (가칭)○○초등학교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철근콘크리트)
2. 원도급사 : (주)○○○○○
3. 하도급사 : (주)☆☆☆☆
4. 하도급 계약금액 : 200,000,000원
5. 원도급사 주장 타설금액 : 180,000,000원
6. 하도급사 주장 타설금액 : 200,000,000원
7. 기지급액 : 100,000,000원
8. 공탁금액 : 100,000,000원



위 임 장

주 소 : (소관기관 주소 입력)

소 속 : (소관기관명 입력)

직 급 : (대리인 직급 입력)

성 명 : (대리인 성명 입력)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금전을 공탁하는 업무행위 일체를 위임함.

2020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지방법원 ☆☆지원 귀하



VII 참고자료



1. 압류금 처리 예시



채권압류 예시 1

- ▶ 채무자 A에 대하여 '20.6.10.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압류금액 10,000천원)이 접수되고, '20.8.7. "을"의 채권가압류(압류금액 5,000천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 ☞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되었으므로 청구가 있을 시 우선 전부명령금액을 변제하고, 변제완료 후 가압류금은 압류함



채권압류 예시 2

- ▶ 채무자 A에 대하여 '20.6.10. "갑"의 채권가압류(압류금액 5,000천원)가 접수되고, '20.8.7. "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압류금액 10,000천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 ☞ A의 채권가압류가 먼저 송달되었으므로 A의 6월, 7월 봉급에 대하여 급여 공제 요령에 따라 압류하여야 하며, '20.8월부터는 "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갑"의 압류요구와 경합이 되므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무효)하며 다만 압류부분만은 유효하므로 "갑"과 "을"의 채권액이 도달될 때까지 압류 후 공탁처리



채권압류 예시 3

- ▶ 채무자 A에 대하여 '20.6.10. "갑"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압류금액 5,000천원)이 접수되고 곧바로 청구가 들어와 매달 압류금액을 지급하던 중 '20.8.7. "을"의 채권가압류(압류금액 10,000천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후행하여 채권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경합이 발생하므로 "을"의 채권가압류가 접수되는 즉시 지급을 중지하고 압류금을 별도 보관 후 일정 기일이 지나면 공탁 처리하여야 함



채권압류 예시 4

- ▶ 공사업체 A가 100,000,000원 학교공사를 계약 체결하였으나 '20.6.10. "갑"의 채권압류 추심명령(압류금액 80,000,000원)이 접수되고, 준공내역서상 노무비가 50,000,000원인 경우 준공금 지급 방법은?
- ☞ 「건설산업기본법」 88조에 의거 하여 노임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이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준공금인 50,000,000원에 대해서만 압류권자의 청구가 있을 시 지급이 가능
- ☞ 노무비는 원칙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88조에 의거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공사업체에 대금 지급이 가능하나, [경기도교육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하여 노무자들의 노무비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무자들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직접 지급 관련 서류를 받아서 지급하나, 장기간 노무비 관련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공탁 처리함





채권압류 예시 5

- ▶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당사자(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 ☞ 「민사집행법」 제23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내역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자 한다면 아래 법규정에 의거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야 하며, 직접 제3채무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음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2. 채권압류 관련 소송 사례



소송 사례 1

- ▶ ○○교육지원청에서 계약한 공사대금에 대해 A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이 경기도교육청(소관: ○○교육지원청)으로 적법히 송달되었으나, 당시 공사대금의 정확한 정산내역을 제출받지 못하여(계약상대자의 중도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 추심명령에 응할 수 없던 중 경합하는 채권압류 결정이 접수되어 공탁을 실시함 → 경합에 따른 선순위자가 공탁금을 모두 배당받아 A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 ⇒ 우리교육청 패소

〈 판결요지 〉

-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 A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을 청구 받은 때
- 같은 날 A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했어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 발생)
- A채권자의 추심금 청구 이전 계약상대자의 공사포기서를 제출받아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그 무렵 즉시 공사타절 정산을 마쳤어야 함.
- A채권자가 추심금을 청구한 당시, 계약상대자(공사업체)의 미협조에 따른 타절준공 지체는 A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공사대금이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



**소송 사례 2**

- ▶ 경기도교육청으로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압류 채권(ex. ○○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공사대금, ○○용역 대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결정문을 법원으로 반송한 사안에 대해 채권자가 5년 후 제3채무자인 교육청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 제기

⇒ **우리교육청 패소**(판결금 및 지연이자 배상결정)

< 판결요지 >

-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나, 경기도교육청 산하 기관의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경기도교육청 이고,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어떤 산하 기관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파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압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즉시 항고하는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
- ☞ 압류 결정문 상 문구 참고 ‘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내에 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산하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대상자와의 계약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음을 알리고 지급을 금지 시킨 후 계약현황을 파악할 여지도 있었으나 법적 근거 없는 압류 결정문 반송 처리로 문제 발생
- 전부명령의 대상채권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압류 대상 채권액이 집행채권액(결정문 상 금액)보다 적을 경우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압류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위 내용은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 결과이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고문변호사 자문 요청 등을 통해 재검토 후 대응 필요



3. 관련 법령

- ① 민사집행법 〈불임 - 금전채권 압류관련 조항〉
- ② 공탁법
- ③ 국세기본법
- ④ 국세징수법
- ⑤ 지방세기본법
- ⑥ 지방세징수법
- ⑦ 국민건강보험법
- ⑧ 국민연금법
-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⑩ 건설산업기본법
- ⑪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⑫ 공탁규칙
- ⑬ 민법
- ⑭ 민사소송법



붙임 1 민 사 집 행 법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4조(집행법원) ①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26조(심문의 생략)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⑧ 전부명령이 있는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30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제234조(채권증서)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제235조(압류의 경합)

- ①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 ②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제236조(추심의 신고)

-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②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239조(추심의 소환)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제240조(추심권의 포기)

- ①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 ② 제1항의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 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⑥ 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제229조제5항·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제247조(배당요구) ①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249조(추심의 소) 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 ③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④ 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제250조(채권자의 추심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제4관 배당절차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처리 요령

총괄 | 김용호(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기획 | 정승훈(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경리담당사무관)

박경연(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주무관)

집필 · 편집 | 박주율(고림고등학교)

남현창(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서해니(경기도교육청 행정국)

발행일 | 2020년 7월
